

오피니언

다산포럼

민병욱



자꾸 "어렵다", "힘들다"고 하면 실제 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니 그런 말은 안 하겠다. 하지만 한 출판사 친구가 들려준 이 얘기만은 하고 넘어가자. "대학가와 중·고교 앞 중소형 서점들이 속속 문을 닫는다. 앞으로 지하실 미로 속 대형서점만 남게 될 것이다." "학문이 깊은 어느 교수가 원고 봉투를 들고 출판사를 찾았다 속절없이 물러났다. 언제 책이 왜 나오지 아무도 모른다."

은행, 자동차 회사가 흔들리고 건설사가 워크아웃 되는 마당에 규모가 작은 출판의 불황쯤이야 눈에 잘 안 띠지 모르겠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고 해고 유령이 회사를 어슬렁거리는 마당에 책 얘기는 어쩌면 사치일지 모른다.

그렇다. 요즘 정부가 혼이 빠져 몇 십조 원짜리 독터전 텔 막기 바쁜데 골방 규모 출판사까지 손놓고 "저요, 저도 살려주세요!" 외쳐다져 들릴 리 없다는 것쯤 누구나 안다. 그렇지만, 출판사 서점 다 쓰러지고 책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정말 알고 있는가. 특히 정부는 알고나

있는가? 요즘 위기는 산만큼 커지고 기회는 바늘처럼 작아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입에 불리고 산다. 세계경제 종주국 미국이 무너지는

책과 펀더멘탈

바람에 속절없이 당한 위기니만큼 뽀족한 대책도 없고 우선 말로라도 국민을 위로 하자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말뿐이 아닌 실제로, 이 위기를 기회로 엮어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할 수밖에 없다. 위기의 풍랑에 넋을 놓고 그냥 휩쓸려만 간다면 그건 퇴출이요 종말이요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일은 뭘까. 당연히 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반성함으로써 앞길의 물과구름을 찾는 것이다. 잘나갈 때는 그냥 달리기만하면 됐지 왜 달리지 어떻게

달리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으니 지나온 길과 앞길을 살펴볼 시간이 생겼다. 이걸 어쩌면 다행이다.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 바로 그 점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확실한 재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남 따라 덩달아 뛰고 남이 넘어지자 함께 자빠졌다면 이제 혼자서도 달리 보고 달릴 수 있는 실력 체력을 다지자는 것이다. 현 글로벌 위기는 미국서부터 번진 시장낭만주의와 탐욕의 결과고, 우리

는 거기에 과도한 수출의존, 작은 정부, 고물가에 가계 빚 급증까지 복합 작용해 위기의 골이 깊어졌다고 한다. 이제 달길 달고 채울 건 채워 실력과 체력을 다진 다음 다시 뛰어야 한다. 그래, 앞졌는데 그럼 방법이 뭐냐고? 그걸 가르쳐주는 칩경은 책 속에 있다.

앞서 출판사 친구의 얘기로 돌아가보자. 서점, 출판사가 문을 닫고 좋은 책 찾기가 힘들어진 상황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단지 미국발 위기 탓에 갑자기 우리 출판계가 불황에 내몰린 건 아니란 얘기다. 그전부터 책은 안 팔렸고 국내 팔

자의 노작(勞作)과 서점 수, 국민독서량은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거기에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중 하나로 우리가 남 따라 무작정 달려온 것, 일과 삶의 최우선을 오직 돈, 경제에만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해 위기를 증폭시킨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 때마다 우리는 펀더멘탈 얘기를 자주 했다.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는 "펀더멘탈이 튼튼해 국가도산 우려는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듣는다. 아마 달러 보유액이 많고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다. 돈과 경제 시스템이 나라를 지탱하는 즐거움을 부인할 순 없다. 그렇더라도 국가 펀더멘탈은 무엇보다 국민이고 그들의 삶의 질, 교양, 지식이 나라의 근간이라는 인식 위에서 정부가 위기에 대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든. 그래서 덩치 큰 회사 살리는 돈의 몫의 일부만 팔라 책과 출판, 서점의 회생에 붓는다면 미래를 위해 가장 알찬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불황기엔 출판계가 맨 먼저 호약을 불고 회생은 맨 나중에 한다는 정설을 깨는 정부가 되었으면...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역경제권 변경 없는 호남발전 가능한가

정부가 그동안 두 차례나 연기했던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확정된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 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의 세금감면도 10년으로 늘리고, 남해안 등을 초광역 단위로 개발한다. 지방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지방민심을 달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에도 반응은 회의적이다. 정부가 이것 저것 노력한 흔적은 엿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효과를 알 수 없다는 걱정이 더 많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먹을 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유턴하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되돌리는데 3년 세금감면 연장하는 것 정도가 구체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오지 않는데, 이 정도의 유인책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쏘던 짐을 다시 풀지 의문이다. J 프로젝트, 호남 고속철 조기완공, 초광역경제권 개발 등은 재탕 삼탕인데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이 없다. 지방재정 해결책도 나중으로 밀렸다.

특히 광역경제권을 재조정해 호남을 2개 권역으로 분리해달라는 지역 최우선 요구사항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것은 실망이다. 지역에선 이대로 가면 낙후의 멍에를 벗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절박함을 담아내지 못했다.

정부가 다행히 내년 초에 지역발전 3단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3단계에 서는 '균형발전'에 더욱 충실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여기에는 호남 광역경제권의 분리 지원을 명시하고,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대원칙을 못박아야 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 보인 전남 한우 지원방안 강구해야

전남도내 한우사육농들이 고품질 한우고기로 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전혀 두렵지 않을 정도라니 반갑고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32년간 한우만 키운 나주의 이동재 씨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설이 임박해 다른 축산농가가 울즈러를 때 사육두수를 오히려 늘렸다. 이씨는 특히 미생물체를 섞은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육프로그램을 가동해 연간 100마리를 출하, 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전남산 명품 '지리산 순한 한우'도 요즘 상한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시작 일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대형마트 매출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호주산 쇠고기와 일반 한우 판매량은 크게 줄었으나 순한 한우는 27%나 매출액이 신장됐다고 한다. 사료에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한우를 키워 친환경 제품임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 비결

이다. 한우고기의 품질만 높이면 수입 쇠고기가 아무리 싼값에 몰려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고품질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값이 폭등한 사료와 겹도는 원산지 표시제가 한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배합사료 가격은 올 들어 예닐곱 차례나 인상되면서 지난해보다 순이익을 40% 이상 까먹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된 지난 7월 이후 적발 건수가 이전 7개월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값싼 수입쇠고기와 감당하기 힘든 사료 값 때문에 대부분의 한우농가는 지금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산비라도 일부 지원해 맞춤형 방도를 찾게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단속인원을 보강하고, 배정영업을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속여 팔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NGO 칼럼

김일용



매서운 칼바람이 귤전을 스쳐지나간다. 지금까지 반세기를 맞이해온 추위이지만 웬일인지 올 겨울의 바람은 더 매서운 것 같다. 아무래도 현재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리는 모양이다. 몇 년 전에 광주에 대단한 폭설이 쏟아졌을 때도 이처럼 삭막한 겨울은 아니었는데 참으로 스산하기만 하다.

다고 해도 한사람의 밥값만 36만원이니, 두 노부부가 식사만 하고 생활한다고 해도 72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자녀들이 최신의 효를 실천한다고 해도 노부부는 무언가 일을 해야만 생활할 수 있으며, 사람스런 손자들이 몇몇 천원의 용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 광주시약사회가 광주공원에 있는 사랑의 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돌보시라는 의미에서 영양제를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매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선진국이라는 의미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돈 잘 벌고 잘사는 것으로만 평가하려는 것 같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더 우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하루는 아침에 그러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느 아주머니가 내게 말했다. "어쩔 저렇게 노인들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저분은 자식들도 없는 걸까요? 내 부모님이 저런 처지라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혹시 나도 저렇게 될까 걱정이 되네요." 그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쉽게 동조한 듯했 내 마음은 점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풀어보려는 욕심에 점점 빠져들었다.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금도 깎아주고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난 다르게 생각한다. 선진국이라면 빈부의 차이가 있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먹는 것, 자는 것, 치료 받는 것 그리고 교육 받는 것에는 차이가 없게 해야 한다. 60세에 은퇴를 하고 20년을 수입이 중단된 채 자녀들로부터 소외 받으며 살아가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정책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건설 등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돈이 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은 동결하거나 줄였다. 아마도 돈이 들고 돌아도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미미할 것이다. 이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미약복지운동본부 광주지부장>

기고

송인호



지금 영산강이 물살을 앓고 있는 이때 각 언론 및 환경단체는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어가고 있다. 정부의 한반도 대응하는 국민의 대다수의 반대 여론으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과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영산강의 뱃길 살리기 운동의 취지는 썩어가고 훼손되는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운하와 뱃길은 엄연히 다르다. 운하는 배의 운항을 위해 만든 인공수로와 그 밖의 수역 또는 다른 운하와 연결되어 내륙수로 망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항해보다는 주로 식수와 관계용수를 구하기 위해 운하를 만든 사례가

의 방법이다. 둘째, 풍부하고 안전한 영산강이다. 수자원 관리 효율화로 하천유지 용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전략적 홍수방어 조치 안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생태적으로 건강한 영산강이 되어야 한다.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하천과 육상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생태환경습지 공원, 생태환경 근린공원, 생태환경 테마관, 생태환경문화 체험관, 자연생태 학습장, 환경생태시설물 조성 등이다.

넷째, 친수하고 가고 싶은 영산강이 되어야 한다. 친환경적인 뱃길 복원으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영산강을 누구나 찾고 싶은 강으로

이에 해당된다. 뱃길이란 바다나 강 또는 호수나 운하를 막론하고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수면을 말한다. 이는 물길 또는 수로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같이 운하는 자연환경에 인위적인 행위를 가해서 목적물로서의 이용 즉 물의 관계 수로나 물류를 이동시키기 위한 제반목적 행위를 일컫는다.

복원이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단어이다. 즉 소생시키고, 생기를 주는 의미이다. 뱃길 복원이란 본래의 모습대로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수면을 말한다. 복원이라는 말과 살리개라는 말은 동의어이다. 그렇다면 뱃길 살리개란 어떠한 방법으로 복원되고 살려야 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이는 우선 친환경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맑고 깨끗한 영산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산강 지류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특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하천자정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곧 수질을 개선하는 최선

다. 주변경관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강길 조성과 수변도로와 대중교통의 순환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하천변을 자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하고 하류지역에는 수상 레저, 환경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 등이다.

다섯째, 영산강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산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역사적인 이슈, 유적 등을 감안 역사·문화 체험 지구를 조성해야 한다. 일례로 옛 나루터를 복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산강 뱃길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 복원을 통해 사람과 소통하는 하천을 조성하고 둔치 및 하천변의 치수·환경·문화 복합기능의 친수공간을 설치함으로써 관광레저와 역사·문화가 숨쉬는 영산강이 될 때 영산강이 뱃길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 이 지역의 삶의 질과 관광소득 증대로 후세에 풍요로운 삶의 터가 될 것이다. <영산강뱃길살리기 운동본부 공동의장·대불대 교수>

학문도 쌍방향성 중요 '답안지 돌려주기 운동' 퍼져

최근 몇몇 대학에서 시험 후 답안지 돌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시험 성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해보고 대학으로부터 좀 더 정당한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취업에 위해서는 학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에 그 많은 학생들에게 답안지를 돌려주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떻게 채점하는지 의문이 든다.

꼭 성적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 동안 배운 내용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작성한 답안지에 교수가 첨삭과 함께 답안지를 돌려주어 학문의 쌍방향성 확립과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에게 답안지를 돌려주거나 공개해야 한다. <이대영·여수시 평려동>

이주여성에 한국문화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먼저 이해를

다문화 사회다. 주위에서도 외국에서 시집 온 이주여성들을 흔하게 본다. 이제 우리도 이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여성들에게 우리 것을 주입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그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 갔을 때 그곳 초등학교 수업 방식을 본 적이 있다. 그때 교실 뒷편에 그려져 있던 각양각색의 그림을 보고 놀랐다. 무슬림은 사원의 책 모양에 라마단 이야기

를, 코끼리 모형의 책에는 힌두 문화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기독교쪽엔 예수가, 절 모양의 그림에는 가부좌를 틀고 있는 온화한 부처가 그려져 있었다.

영국에선 학생들이 다문화화를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것부터 가르친다고 말했다.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육을 먼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슬·목포시 영해동>

無等鼓

'3천만달러짜리 빵'이라 하면 일반인들은 지구상에 그렇게 비싼 빵이 있을 까하는 상상을 할 것이다. 다이아몬드 등 보석으로 장식돼 기네스북에 오른 고가의 빵 정도를 머리에 떠올릴 것 같다. 하지만 '3천만달러로 빵 한개 밖에 살 수 없다'면 상상력은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

최근 액면가 5억달러 짜리 지폐를 찍어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그 나라 돈으로 그것밖에 살 수 없다. 5라는 숫자뒤에 0이 8개 붙어 있는 5억 짐바브웨 달러의 실제가치도 미화 10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얼마 가지 않아 그 가치는 5달러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아프리카 최빈국 짐바브웨의 현재 모습이지만 세계적인 불황이 검은 대륙을 덮고 있다.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난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에 국제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부자의 수가 가하급수적으로 가장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대륙이 아

프리카는 사실에 직면하면 일반인들은 또 한번 헛갈려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빈부 격차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인데, 아프리카 52개국의 백만장자 수가 무려 15%나 증가했다는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통계도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작성된 것이라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8%라는 고도성장을 유지해온 중국도 불황에 휩싸이면서 내재했던 실업문제, 빈부격차 등의 사회모순이 한꺼번에 터질 위기에 처했다. 중국지 도부는 불만이 분출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빈부격차 문제로 한국을 아프리카나 중국과 비교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15일 정부가 내놓은 2단계 지방발전 대책이 알맹이가 없고 전신성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혹은 지방과 지방간 불균형, 그거 빈부격차의 다른 이름이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h@kwangju.co.kr

빈부격차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distribution information.